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저금리의 함정

한고비를 넘긴듯하던 그리스 경제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집행한 EU와 IMF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유럽 은행들의 위기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도 미국 금융당국이 투자은행 하나를 파산시키면서 벌어졌다. 처음 미국 금융당국은 부실은행 한 곳을 처리한다는 안일한 판단을 했지만, 서로 얽히고설킨 국제금융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 위기로 이어진 때문이다.

그리스 역시 같은 문제, 나아가서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드리워진 이유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로존에서 부실한 재정을 가진 빚더미 국가 하나를 파산시키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행 하나의 위기가 전세계를 위기로 몰고간 것이 금융시장인데, 유로존의 주요 국가 하나가 파산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

그리스는 이점을 잘 활용 내지는 악용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바로 이점 때문에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리스 쪽의 '배 째라'식 대응이 얄미워보인다. 갚아야 할 돈은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는 뻔뻔함은 둘째치고, 지난번 총선에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신생 정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이런 그리스는 대체 왜 이렇게 뻔뻔한 대응을 하는 것일까?. 진짜 그리스는 양심도 없는 철면피일까?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배경이 숨어있다. 우선 그리스 문제의 핵심은 유로존 가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 유로존 단일통화를 구상할 때 경제력이 큰 독일이 주도할 것을 염려한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억지로 자격이 부족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무리하게 가입시킨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그리스는 자체의 체력으로는 금리가 유럽 평균보다 높아야 정상이지만, 금리조절기능을 유럽중앙은행에 위임한 탓에 적절한 수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금리를 낮춰주며 '전화 한 통에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처럼 그리스에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며 돈놀이에 몰두했고, 그리스는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들로 흥청망청하다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싸게 빌려준다는 독일이라는 대부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그 돈으로 집을 산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는 좋은 조건으로 유로존에 가입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팍한 기준을 내세워 공공자산을 헐값에 가져가려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독일은 돈 빌려 투기하다 망하고는 나 몰라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두 개의 기차는 충돌을 원치 않는다. 독일은 떼이기에는 너무 큰 돈을 빌려준 셈이고, 그리스는 빚 갚으려고 집까지 팔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는 처지니 그렇다. 결국, 해법은 타협뿐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세계 경제에 치명상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문제는 여기에서 얻는 우리의 교훈이다.

우리나라는 금리결정권을 한국은행이 가진다. 손쉬운 수단인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본성을 막는 장치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기능인 때문이다. 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기획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번 금리인하 때도 노골적으로 인하를 압박하더니, 급기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는 장관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자.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투기가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의 활황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든지 혹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팔라지며 우리도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 일어날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스가 저금리 자금으로 무너진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금리정책은 신중해야한다.

올리든 내리든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 영 철
광주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나는 어린 시절에 꿈이 없었습니다. 학생부 직업란에 그저 남들처럼 회사원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쓰곤 했습니다. 미래에 뭐가 될지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왜 되어야 하는지는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간절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히 문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조금은 멋져 보이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왜 되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라는 물음이 떠오르면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삶에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왜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소위 삶에 대한 어설픈 성찰과 함께 나의 마음의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자리 잡으면서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간에 대해,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조금씩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꿈은 '무엇이 될까?'에서 '어떻게 살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황금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나의 꿈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처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의 반은 실현되고 반은 진행 중입니다. 신부의 꿈은 이루어졌으나 '왜'에 대해선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꿈은 하느님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룰 수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신부로 살고 있는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부가 무슨 꿈이 있을까?'하고 의아해 할지 모릅니다. 나의 꿈은 '곱게 늙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것 아닌가.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 분은 이미 은퇴하신 신부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교수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곱게 늙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리 젊은이보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고 계실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어떤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곱게 늙는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막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고상하게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산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늙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폭력과 전쟁에 맞서 외치고 부르짖으며 늙어가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는 세대에 알려주며 늙어가는 것, 인간의 무자비함에 맞서 자비의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랑의 삶을 살며 늙어 가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곱게 늙어가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런 나의 꿈은 하느님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일국의 대통령부터 미천한 사람까지 나름의 꿈이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꾸는 꿈일 수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꾸는 꿈일 수도,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아름다운 것은 무언가를 희망하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안위와 탐욕으로 점철된 꿈,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꿈은 천박하고 추악한 꿈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 갑니다.

매일의 삶이 저마다 품고 있는 순수한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순이씨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기 고 '법의 날'(25일)을 맞아

법질서란 무엇인가

이 방 현
광주지검 검사

비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Lievig, Justus, Freiherr von)는 1843년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라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 식물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 갈등으로 남북한이 따로 정부를 수립한 후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그 후 막대한 국방비 지출의 부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4위이고, G20 국가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설만큼 경제적 자본을 갖추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경제적 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요소가 부족하면 국가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이중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에 뒤이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아 생산성은 올라가고 국민소득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 법질서(Rule Of Law) 지수는 20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2009년과 2010년 40위에서 2012년에는 44위까지 밀려났고, 2013년 또 두 계단이나 떨어져 46위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0년 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p 높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하면 같은 기간 연 평균 약 1%p의 경제성장을 추가로 이룰 수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일수록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법치주의에 의해 예측가능한 법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이 높다.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력만은 아니다. 경제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일찍이 법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94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일반시민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기초 법질서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법질서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사회 검찰 프로그램(Community Prosecution)'을 시행하였고, 그 성과를 토대로 현재 미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그동안 법질서와 관련된 일들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대이다.

올해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재도약을 위해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해 세계 대학생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통질서 등 기초 법질서 확립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광주·전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일류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25일은 제52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이란 국민들이 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법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질서의 확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社 說

건설사發 위기 조짐 지역경제계 우려 크다

광주·전남 경제에 '건설사발(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흥건설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금호산업 인수전을 둘러싼 지역 기업 간의 출혈경쟁이 예고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전국 아파트 공급량 3위인 중흥건설은 200억 원대의 비자금 횡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달 초 자금담당 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원주 사장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검찰 수사 중에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올해 분양계획마저 불투명해졌다.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 협력업체 수만 1000여 곳, 소속 근로자가 5만 명에 달해 중흥건설이 주저앉을 경우 부도 '도미노현상'도 우려된다.

여기에 오는 28일 금호산업 인수 본입찰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양측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인수금액이 급상승해 결과적으로 채권단만 배를 불리게 되고, 그로 인한 부담은 지역경제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누차 강조했지만 지역 기업 간 소모적인 경쟁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금호그룹 또한 명분이 크더라도 지역경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의 시각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광주·전남 경제의 부침은 건설업이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6~7년 전 지역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 지역경제는 침체 국면을 면치 못했다. 검찰은 중흥건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빛원전, 주민들 피해대책 수용이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가동을 위한 바닷물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어업피해 예방 등 지역민을 위한 대책은 외면한 채 기한을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5월로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2042년 7월 말까지 기간을 27년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21일 군에 제출했다. 6개 원전 가동에 필요한 연간 111억5800여t의 바닷물을 그때까지 연장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 반응은 한수원이 자초했다. 한수원은 연장기한을 30년 요청했다가 영광군이 4년만 허가하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고 기각을 당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업 피해 예방대책 미비, 방류제로 인한 원전주변 해역 변화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영광군이 제기한 문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수원이 원전의 입장만 내세울 뿐 지역을 위한 의무는 다하지 않아 퇴짜를 맞은 셈이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조치를 선결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한빛원전에서는 지난해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장기 점검 후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핵심설비 고장으로 불시에 정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 연장으로 인한 대책 등을 세우지 않자 주민들은 원전에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영광군과 주민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수혜가 아니다. 원전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가동편익만 앞세우지 말고 진솔하게 주민과 소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無 等 鼓

동성아트홀

만우절인 4월 1일은 영화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지난 2003년, 배우 장국영이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투신 자살한 소식이 전해진 그날, '아비정전'에 등장한 장국영의 슬픈 눈을 사랑했던 이들은 그게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만우절이었으니까.

4월 1일을 잊을 수 없게 된 이들이 또 있다. 대구의 영화팬들이다. 그들에겐 4월 1일이 다행스럽게도 슬픈 기억이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날이 됐다.

대구 지역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은 지난 2월 25일 폐관했다.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멀티플렉스에서 운영하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예술영화관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 동성아트홀은 지난해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11년 간 2000여 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온 극장을 사랑했던 이들이 폐관만은 막기 위해 관객극장추진위원회 등을 꾸리며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데 폐관 며칠 후 '거짓말처럼' 대구 광개토병원 김주성 원장이 인수 의사를 밝혔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을 켜지 않는, 영화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극장이 없어지는 게 안타깝고 인구 250만의 대구에서 이런 영화관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학생 때부터 동성아트홀에 드나들었던 딸 아이를 보면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재개관 기념전은 '장국영 영화 특별전', 재개관일은 4월 1일이었다. "거짓말처럼 떠난 장국영을 품고, 거짓말처럼 동성아트홀이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을 맞아 영사시설, 객석, 로비 리노베이션과 함께 지하철 광고도 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부럽다.

동성아트홀의 폐관과 재개관 소식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건 우리 지역도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30년 넘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은 문을 닫을 뻔했다 고객들이 힘을 모아 간신히 살려냈고, 의욕적으로 시작됐던 문화 공간들이 경제 논리에 밀려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들을 지켜나가는 건 우리들 몫이다. 사라지고 난 후 아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